

개발도상국 내 빈곤, 불평등 및 인권

빈곤과 불평등이 어떻게 인권과 연관되는가?

2023. 10. 5.(목) 13:00-15:30

주관: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 아시아법률자원센터 광주지부

배경

빈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빈곤과 인권침해 문제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의 부재 문제로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의무 실행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적인 인권 기반 접근법 아래에서 조사 및 기소는 국가의 책임이며, 더 나아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도국에서는 조사, 기소, 및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이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나 법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제도는 피해자가 경험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 실현이나 해결책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시도를 제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국가 내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실패의 결과는 부패 확산의 주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다시 빈곤이 심화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권침해라는 것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만이 아닌 경제 및 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도 포함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는 불법 체포, 불법 구금, 고문,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법적 살해, 공정한 재판의 거부,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더 나아가 자유 및 공정 선거 방해와 같은 조작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요인이 빈곤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자유 보장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과도한 규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생명, 교육, 보건, 문화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다.

전체 경제는 사람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희생시킴으로써 권리 박탈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도 및 저항을 와해



시킨다. 반테러법, 국민 안보법 또는 국가안보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항거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고도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부산물이다. 위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되는 기본적인 전략은 법치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가의 이러한 시도들은 개인과 집단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법치를 대체하고, 민주적인 공간 및 참여를 거부하며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국가의 구조 간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은 특정 국가의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불평등과 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국제관계에도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살펴볼 때, 경제, 정치체계, 국제법 및 도덕적 질서를 포함한 법체계에 전 세계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인류 및 자연 자원이 위협하고, 전 지구적 재난이 과거보다 더욱 위협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민 사회, 지식인들, 이러한 위협을 다루며 사람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생명권과 생계 수단, 더 나아가, 식량에 대한 권리, 아동권,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아, 영양실조, 약물치료 거부, 아동에 대한 기본교육 시설에 대한 거부, 그리고 환경과 자연 파괴 문제를 세계적 그리고 국가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그 어느 문제보다 더욱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

목표

본 회의의 목표는 인권 박탈, 사법제도의 훼손, 심각해지는 부패 및 그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사이의 개괄적인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박탈의 근원이 되는 실질적인 현실을 무시한 채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권관점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보호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빈곤, 불평등과 인권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연대의 형태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내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식량 및 의료 그리고 아동권리의 거부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빈곤 및 권리의 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제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사람들 간 연대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점 논의사항

1.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
2. 일부 국가 및 가능한 연대 행동에 대한 간략한 발표

